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HPAI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답 자가도축 금지, 발생시 초동방역 강화

10월, 겨울 철새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2003년 이후 세차례에 걸쳐 국내 양계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의식이 다시 싹트고 있다.

HPAI가 세번째 발생했던 지난 4월 전국을 휩쓸고 42일만에 종결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주었다. 겨울이 아닌 늦은 봄 발생하면서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으로 일관해 오던 것을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해야 했으며, 가축방역 조직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역의 허점이 노출되었고, 발생농장 살처분과 동시에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조치가 병행되지 않아 초동방역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SI발생을 미리 검사할 수 있는 조기검색 시스템이 미흡해 의심축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재래시장, 가든 등을 통해 전파되는 유통경로를 차단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SI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SI방역실시요령 등 제도적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우선 재래시장을 통해 살아있는 토종닭·오리 등을 조리판매 목적 등으로 공급하여 SI확산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내 개정을 목표로 닭, 오리 자가도축 금지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들어갔다. 또한 오리에 대해 등록대상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하여 등록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강화를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축산법을 금년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SI방역실시요령에 있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SI 의심축이 신고되면 초동방역팀이 조직되어 신속하게 농장에 파견되어 초동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초동방역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요원으로 구성되며, 3인이 1조가 되어 투입이 되는데 출입통제 등 방역활동부터 SI양성 확인시 살처분 완료까지 모든 일을 통제하게 된다.

또한 재래시장, 도심지 등 축사외 장소에서 SI발생시 방역실시요령을 새롭게 규정하여 신설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삽입되었다. 본회에서는 금년에도 '농장내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로인해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함에 있어 정부에서는 국가유전자원 보존, 농장방역 등급제, 차등보상지원 문제 등 국가 및 농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는 사항까지 검토하여 제도를 보완해주길 기대해 본다.

## 계열화 사업 본 취지 잊지 말자 육계계열농가 유가 현실화 등 시급

고유가와 폭등하는 배합사료 가격으로 인해 축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육계 계열농가들이 높아진 유류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육계농가들은 축산전문지에 계열사들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골자를 보면 유류대 현실화 요구는 물론, 각 계열사별 농가대표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계열사의 생산자지정 움직임 중단, 계열사의 정책자금 집행내역 확인·감독 철저, 수입닭고기 수입 업체에 모든 지원 중단 등 농가들의 어려움을 한 목소리에 담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계열사와 농가들의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양계산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열사의 유류대 현실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농가들은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농가들은 계열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가 폭등에 따른 농가들의 현실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계열사들은 유류가격 현실화보다 농가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오는 등 현실과 차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농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계열화 사업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전문 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괄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의 지원아래 육계 계열화사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계열주체는 농가들과 사육계약을 통해 사육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일부 계열사와 농가들 간에 사육계약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계열사와 농가들이 종속관계로 점점 바뀌어 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에서는 2002년 표준계약사육서를 만들어 배포, 홍보에 나섰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일부 계열사들은 싼가격에 들어오는 수입닭고기를 수입해 국내 육계시장의 앞날을 어둡게 하기도 하였다.

현재 육계산업이 약 80%이상 계열화로 전환된 현 상황에서 농가들은 계열사들과 동반자이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양돈업계에서는 모 닭고기 계열사의 양돈업 진출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등 계열화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계산업을 주도하고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계열사가 있기까지는 닭고기의 원료를 공급하는 육계 생

산자들이 있다. 육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열사와 농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유류가격 현실화 등 농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진정한 계열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 양계협회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양계업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신호탄

양계협회가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금년 18대 회장단이 출범하면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6월 이사회를 통해 공식 기구로 만들어지면서 정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단과 협회를 그동안 이끌어 왔던 임원들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최종 구성이 되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협회 내·외부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는 물론 대정부 정책 등에 대해 양계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주는 기구이다. 타 업계인 양돈협회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과거부터 운영하면서 양돈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던 터라 양계협회도 이러한 기구의 구성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 거는 양계인들의 기대는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양계업계는 종계, 채란, 육계산업이 공존하는 산업으로 소위 '한지붕 세가족'으로 불리울 만큼 바람 잘날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모순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 양계협회 내부적인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지붕 세가족'이 '한지붕 삼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계업계는 앞으로 양계 의무자조금제도 정착, 양계산업안정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 SI 등 질병 청정화, 검정사업의 새로운 방향모색 이라는 큰 숙제가 놓여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계업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업계의 선두에서 이끌어갈 양계협회의 위상을 키워야 하는 대 전제가 따른다. 이 시점에서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책위원회의 구성원중 고문단을 보면 전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박해상원장(농촌사랑 지도자연수원)을 비롯하여 전 16, 17대 국회의원과 부평구청장을 지낸 최용규 변호사(한국노총 인천본부 고문변호사)와 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문표 사장(한국농어촌공사)이 선출되어 협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문과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계협회 40년 역사에서 처음 출범한 기구인 만큼 양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굴하고 잘못된 모순점을 바로잡아 협회내 자문기구인 검정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생방역대책위원회와 더불어 협회의 위상 제고 및 진정한 양계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양계**